

국회, '野 입법 강행 → 與 반발 → 거부권' 악순환

방송4법 'EBS법' 필리버스터

野, 강제중단 후 본회의 표결 전망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도 반복될 듯

여야가 29일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날 오전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같은날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법

안 일방 처리, 여당의 반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거부권 악순환이 다시금 재현되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사장이 수개월만에 교체된 것을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하자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방송4법은 당시 법안 숙려 기간과 상임

위 법안심사소위 과정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회의장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국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앞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에 방송4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4법 날치기 비판에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 수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박 권한대행은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라며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구상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열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여야는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 생략,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은 보류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이라며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강위원 "지방의원 앞세워 조직적 '문자폭탄'"

"제보사례 수십 건... 고발조치"
양부남 "자발의지... 동원 안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게 도전하는 강위원(사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앞세워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광주 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단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시·구의원들을 앞세워 양부남 후보를 지지토록 만들고 있다"며 "시·구의원들은 양부남 후보 캠프에 방문하고 권리당원에 지지 문자를 보내고 있다.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일 SNS에 강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강 대표는 "정진욱(동남갑) 의원이 옛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은 변죽만 울릴 뿐이다. 당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광주를 반쪽내는 갈라치기인지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져달라"며 "시당위원장 선거에 뛰어들려면 지금 말고 있는 당대표 직무대행 비서실장 자리와 동남갑 지역위원장을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최근 SNS에 '두달도 안된 국회의원을 기득권으로 몰아 부치면서 광주를 반쪽내는 갈라치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본인이 시당위원장 되는 순간 기득권일텐데 그 나쁜 기득권 왜 하려는지 선동과 프레임짜기로 세상을 속일 수 없다'고 강 상임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군택(광산갑)·조인철(서구갑) 의원도 '당선된 지 두 달도 안된 초선 국회의원을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 측은 "(강 후보의 주장은) '교언영색' 말장난"이라며 "시·구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지 문자를 보냈고, 문자 발송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 지방의원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권리당원 투표는 8월1일~3일까지 ARS로, 대의원 투표는 4일 광주시당 당원대회(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강위원, 기호 2번에 양부남 후보가 배정됐다. 선거인 수는 대의원 670명·권리당원 10만1897명이다.

정성현 기자

조국 "尹 정권 '부자 감세' 혈안... 세계 개편안 검증"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평균이 낮아지는 데 올해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데도 정권은 부자 세



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방안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인데 이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를 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라며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법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다. 다른 야당의 관심과 동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 "尹, 이진숙 후보 임명시 탄핵 추진"

"방문진 이사 선임시 불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차례차례)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 법안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선서를 받아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룹 회장의 사재 출

연을 통한 피해 보전·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의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후속 입법에 나선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인 전하람 의원 안, 상설특검 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를 마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댯글팀 의혹' 한동훈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댯글팀 운영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9일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 이른바 댯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고발 조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과거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댯글팀을 운영했다며 이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

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댯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댯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